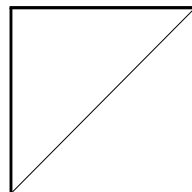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94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3. 18. (제 5 차)

의
결
사
항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3. 18.

1. 의결주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 매매주문 기록·유지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 의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조치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1>

- 「자본시장법」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 「자본시장법」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제3항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 「자본시장법」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2항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감독)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5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기록보관)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제1항 및 제2항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2항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2항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26차 제재심의위원회(2019.12.19.) 심의필
-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2020.1.22.) 심의필

<별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제390조, [별표22]

☐ 직원에 대한 조치

○ 관련 직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조치

- 조치사유 : ①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
②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 매매주문 기록·유지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제105조 제3항, 제108조 제9호, 제422조 제2항,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제106조 제5항 제3호, 제109조 제3항 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제1항, 제4-85조 제1항 및 제2항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2항

2. 조치사유

가.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

-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부는 ××××.×.××.~×.×.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특정금전신탁 상품 ×건의 계약(총 ×,×××백만원)에 대하여 특정 종목의 전자단기사채에 특정 금액을 투자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종목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았음

나.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 매매주문 기록·유지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업에 관한 자료로서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을 위한 매매주문서를 최소 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부는 ××××.×.×.~××××.×.××.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녹취되지 않는 담당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의 사유로 총 ×××건(×,×××억원)의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았음*

* 참고로 중소기업은행 내규 「△△△△ △△△△△△」도 ●●부 내에서 유선전화 및 메신저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에 대하여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녹취가 가능한 유선전화를 사용하거나 행내 인터넷망 PC를 통한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법」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의 구체적 범위·조건·한도, 그 밖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舊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2017.4.18. 법률 제 14827호로 개정되기 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자본시장법」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 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65.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유지한 경우
122. 제105조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경우
125. 제10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자료의 기록·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영업에 관한 자료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 : 10년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신탁인 경우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③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과태료금액 5,000만원

□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기록보관) ① 금융투자업자는 영 제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계약서 등 권리·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무 및 사실 관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규정 등에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12] 제4호 금융투자업자의 기록보관

영업에 관한 자료 - 4.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자료 - ① 공통자료(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 자산배분내역서, 매매주문서, 매매보고서 등

제4-85조(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① 신탁업자는 영 제10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지정받아야 하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8.2.29.>

③ 중소기업청장은 금융위원회에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 었더라면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행의 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붙임2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3.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

☐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부는 ××××.×.××.~×.×.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특정금전신탁 상품 ×건의 계약(총 ×,×××백만원)에 대하여 특정 종목의 전자단기사채에 특정 금액을 투자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종목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3항, 제108조 제9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3호, 제109조 제3항 제2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1항 및 제2항

나.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 매매주문 기록·유지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업에 관한 자료로서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을 위한 매매주문서를 최소 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는 ××××.×.×.~××××.×.××.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녹취되지 않는 담당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의 사유로 총 ×××건(×,×××억원)의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제1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산업금융과 자산운용과	특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864 02-2100-2663	02-3145-7205